

1.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했거나 '22년에 상점가 및 협단체를 통해 지원 받을 예정이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화를 지원받았거나, 스마트 공장/스마트 팩토리 등 유사성격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화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점포가 전통시장 내에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점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 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맹점에 이미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이 필수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4.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20개 미만)의 직영점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20개 이상)의 직영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어떤 스마트기술이 지원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사업공고에 함께 첨부해드린 스마트 기술 종류 설명자료를 통해 어떤 기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나와 있는 중점기술과 기초기술 구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추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5월 중 예정)
- 스마트 기술종류를 검색하면, 해당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기업별 자료가 보여지게 됩니다.
 - 홈페이지 사용법은 추후 선정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기업에서 기술을 보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2년 기술보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8.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2년 기술보급기업 Pool에 등록 되어 있는 기술 중에서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9.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스마트기술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기술pool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10.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최대 5/15백만원이라는게 무슨말 인가요?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과 5/1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총 비용이 5.5백만원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 공급가액 5백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50만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 하고, 공급가액 5백만원의 70%는 3.5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3.5백만원과 지원한도인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3.5백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총 비용이 11백만원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 공급가액 10백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1백만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 하고, 공급가액 10백만원의 70%는 7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7백만원과 지원한도인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5백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 정부지원금은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소상공인 부담금180만원 (600만원*30%)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소상공인 부담금300만원 (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11. 15백만원까지 지원되는 선도형 매장을 지원하고 싶은데, 떨어지면 일반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선도형 매장 선정에서 탈락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일반형 매장으로 신청이 됩니다.

12.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 된 기술은 향후 5년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 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보급가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기술의 경우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약정 기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13.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이 되나요?

- 아니오.**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4.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제작이나, 메뉴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5. 기술 도입 후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기술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 된 기술은 필요로 하는 다른 상점들에게 배포 됩니다.
- 쓰지 않는 기술은 유상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 합니다.

상점가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 응답

1. 상점가 상인조직

① 등록상점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단, 상점 선정 및 현장관리 등을 위한 상점가 상인조직(상인회 또는 번영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점가 상인조직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역할을 대행 가능합니다.

③ 과거에 선정된 상점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20년 및 '21년에 선정되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참여한 상점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⑤ 사업비는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업비는 **기술보급기업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⑥ 상인조직이 스마트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선택**합니다.

2. 상점가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① 00기술보급기업이 우리 상점가·전통시장은 00기업의 기술만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00기업은 기술 도입 시 대가로페이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꼭 선택해야 하는 기술이나, 기술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소진공의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과 기술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특정기술 도입을 강요하거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804~7807)

②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받고 싶습니다.

'22년 **기술보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국비지원금의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자부담금(600만원*30%)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자부담금 300만원(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④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비투자 및 사후관리 협약서는 필수인가요?

(지방비투자) 선택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만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자부담 지원 시 서류평가 점수(최대 10점)에 반영됩니다.

○ 기초·광역단체가 **협업(매칭)**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협약) 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② 사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하나요?

소상공인 점포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관련 기기들을 임의로 처분·대여·교환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③ 신청서류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소진공에 보내면 되나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광역단체는 취합 후 소진공으로 3.18.(금)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취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 3.18.(금) 까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을 인정합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광역단체는 소진공에 신속히 서류를 취합·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단체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 응답

1. 업종별 협·단체

① 신청대상인 업종별 협·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같은 목적(예. 권익보호 및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립한 협·단체를 말합니다.

② 협·단체 회원사라면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상점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협·단체에서 회원사 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마트상점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추천순위는 설정해야 하나요?

- 협·단체는 스마트기술 도입 의지, 활용 가능성 등 내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부 평가기준 예시 :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 및 설치 장소, 기술설치 가능여부, 기술 활용 전략 등 (참고안)
- 회비납부 실적, 협·단체 임직원과의 친분 등 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 기준으로 선정 시,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각 협·단체별 선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50~500개 내외 회원사까지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지원 점포수는 협·단체 수요 및 업종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가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를 통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도에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 및 협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이 안됩니다.

⑥ 협·단체가 스마트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 스마트기술·기업 선택은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합니다.
- 다만, 협·단체가 소진공과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기술 도입을 권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기업을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2. 업종별 협·단체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① 000협단체에서 회비 납부 실적을 스마트상점 선정기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 선택을 강요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평가기준으로 스마트상점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협·단체가 있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804~7807)

②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하고 싶습니다.

기술보유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국비지원금의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자부담금(600만원*30%)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자부담금 300만원(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④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협·단체 및 소상공인 점포)

①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 ① 협·단체가 특정 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 ② 스마트상점이 특정 기술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 ③ 기술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 ④ 기술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에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 ⑤ 협·단체 또는 스마트상점이 기술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 ⑥ 기술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②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아래의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363-7804~7807)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